특집 01

2024년 건설산업 7대 이슈와 대응방향

김영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 건설경기는 최근 4년 연속 상승하던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등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위축되었다. 현재까지도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경기의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2024년에는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하에서 다양한 사건과 이슈로 인해 다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에도 2024년은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자 변화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4년 건설기업의 경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높아진 노무비와 자재비가 고착화되면서 건설생산비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더욱 경영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은 올해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이슈에 대응하여 전략을 수립 및 이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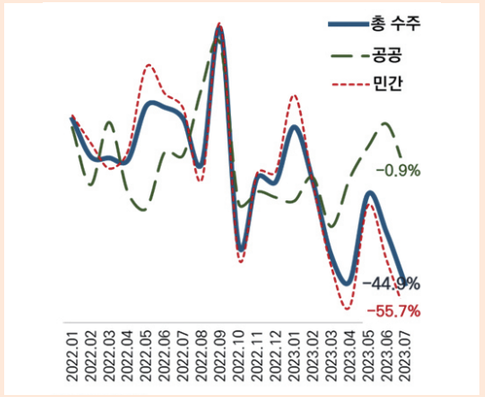
Ⅰ. 최근 건설산업 동향

1.1 건설·부동산 산업 동향

최근 건설경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지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건설수주의 침체가 시작되었고, 몇 년 동안 수주 물량 증가에 힘입어 양호하던 건설투자와 기성 실적도 2023년 하반기 이후 위축기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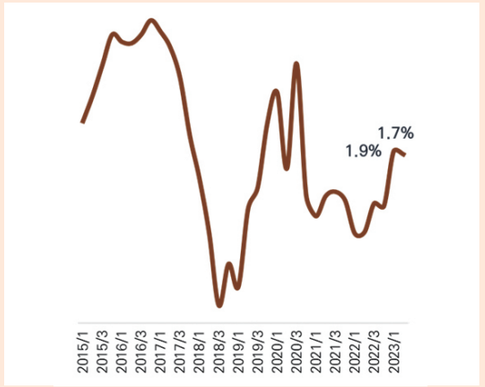
최근 민간주택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2019년 이후 4년 연속 상승했던 건설수주도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둔화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수주 물량으로 인하여 상승하던 건설투자 증가율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의 위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설수주는 190.1조원으로 전년 대비 17.3%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수주실적이 급속히 감속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림 1〉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자료: 대한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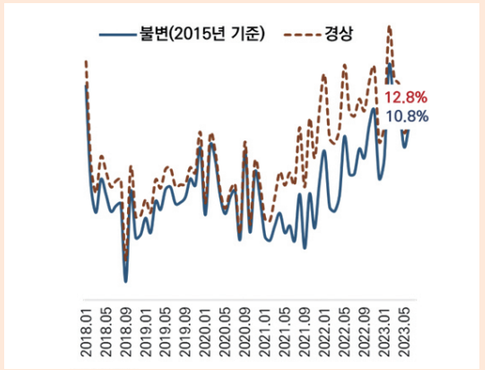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그림 2〉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계절조정, 실질가격 기준,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그림 3〉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주) 2023. 06 및 2023. 07은 잠정치 /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1.2 건설·부동산 정책 제도

최근 건설정책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 부분이다. 지난해 초 발생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로 공공주택의 품질문제가 확대되면서 관련 정책이 지속 강화되었다. 이는 불법 하도급 문제로 확산되면서 전방위적인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침체된 부동산경기의 회복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급대책이 지속되었다.

2023년 1월, 정부는 미분양 증가 및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위축 등에 대응하여 문재인정부 시절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였고,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9월 공급대책을 발표하였다.

2023년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 부당행위 근절대책'이 발표되었고, 그동안 노동조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등 조치 이후, 5월 민 · 당 · 정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졌으며, 불법 하도급 개선 관련한 점검 및 관련 법률 개정 등 하도급 관련 정책 및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품질관리 강화 관련 입법이 지속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이 발표되었다.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관리 관련 정책 강화 움직임은 올해에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 건설기업 경영환경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2023년 들어서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건설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종합건설기업 중 폐업신고를 한 건수는 496개사로 전년 대비 37.0% 급증하였으며, 분양보증사고는 11년래 최대를 기록하는 등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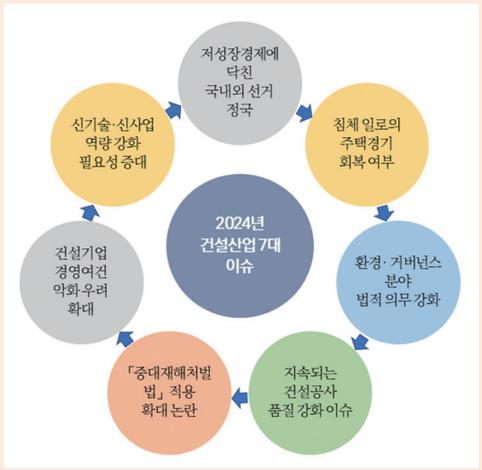
건설공사비는 2022년 10.8% 상승한 데 반하여 2023년에도 지난 8월까지 3.9% 증가하여 안정화되고 있으나, 높아진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건설원가를 지속 상승시켜 건설기업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8개사의 2023년 1 ~ 9월 매출액 합계는 51조 5,806억 원으로 집계되는데, 이 기간 매출원가는 57조 4,917억 원으로 매출원가율은 92.07%에 달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여파도 지속됨에 따라서 대형 건설기업들의 신용도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형 건설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PF 부실 우려와 지방의 미분양 확산, 건설원가 상승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업 경영여건의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2024년 건설산업의 7대 이슈

건설산업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 및 시장 수요의 변화 영향을 받는 특성상, 2024년의 정치 ·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의 외적으로는 2024년에는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의 총선이 있어 국내외 정치 · 경제적 불확실성, 주택경기의 회복 여부, 환경 · 거버넌스 이슈의 부상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의 내적으로는 건설공사의 품질 강화 관련 이슈의 지속 증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건설안전 논쟁 가속화, 건설기업의 경영 악화 심화, 신기술 · 신사업 확산 등이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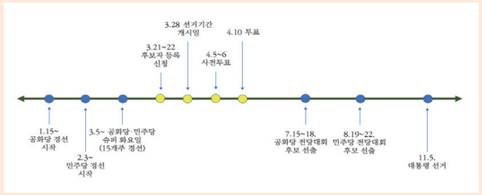
〈그림 4〉 2024년 건설산업 7대 이슈



2.1 이슈 1 : 국내외 저성장경제에 닥친 선거 정국

2024년 4월에는 우리나라의 총선이 있고, 11월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선거 정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칠 선거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핵심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림 5〉 한국 총선 및 미국 대선 일정



금번 총선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이 핵심적인 정책적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번 총선에서는 민생 등 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경제정책 및 경제 회복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케 하는 단기적인 조치 및 계획 등에 대한 공약들이 핵심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공약들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천 공약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공약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대선과정과 결과에 따른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주요 관련 국가들의 리스크 증가 등 2024년 한 해 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의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은 물론, 주변국의 경제 등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미국과의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있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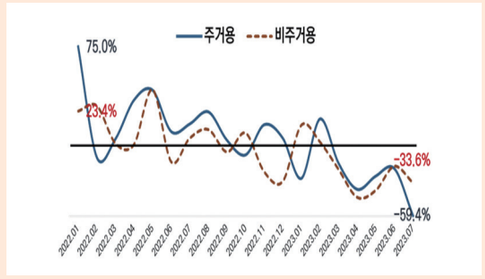
2023년 이후부터 위축되고 있는 건설산업에 있어 국내 총선은 지역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지역투자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도 가능하나,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뚜렷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차별화가 쉽지 않고,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2.2 이슈 2 : 침체 일로의 주택경기 회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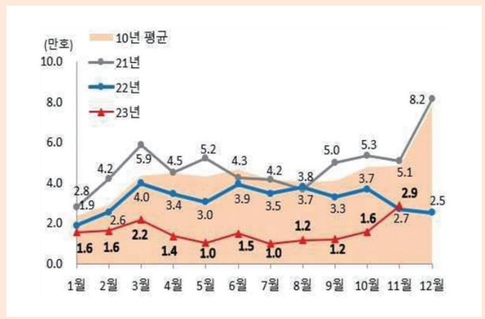
2023년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인하여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거래량은 여전히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경기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고금리 상황의 개선 없이는 당분간 주택경기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이 2022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0.50%의 Big-step(빅-스텝)을 밟은 이후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해 옴에 따라 우리나라도 3.5% 수준에서 동결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나, 고금리의 영향이 주택경기에 미치는 시차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주택경기 위축의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국내 건축허가면적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그림 7〉 2020~2023년 월별 주택 착공 추이



주택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기업 경영여건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자 부담으로 주택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분양시장 역시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아파트 공급물량은 23만여 가구로 13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주택경기의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기업은

더욱 보수적으로 주택사업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택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업은 금리 이상 여파로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분양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착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건설기업이 자금난에 몰린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업의 주택사업 축소를 야기하고 있다. 재개발 · 재건축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융비용 부담과 부동산 PF 부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규 수주에 소극적이고, 사업 시기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의 회복 여부가 2024년 건설산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택경기 회복의 열쇠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주택 규제의 완화책 마련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이슈 3 : 환경 및 거버넌스 분야 법적 의무 강화

2023년 12월 14일, 유럽연합(EU)에서는 환경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공급망 실사법」이 임시 합의되어 정식 승인 · 채택 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국경세'가 EU, 영국 등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3월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4년부터 본격 이행된다. 건축물, 교통, 폐기물 등 분야에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의 이행에 따라 건설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산업은 2018년 수립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에 의거하여 2024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2024년부터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됨에 따라서 공시 의무업체가 기존 366곳에서 500여 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코스피에 상장된 중견 건설기업들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10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15점 이상) 등 후속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건설산업이 건축물 및 건설생산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환경 관련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설산업 혁신 논의에서 많은 관심이 없었던 건설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 등 거버넌스 이슈들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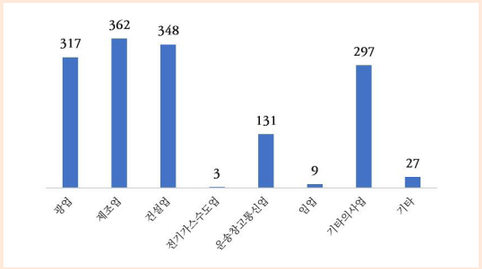
2.4 이슈 4 : 지속되는 건설공사 품질 강화 이슈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촉발된 공동주택 등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품질문제는 2024년에도 지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관련한 건설 정책 · 제도 정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LH 혁신방안' 이후 행정안전부는 하도급만 주는 건설사와는 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하는 등의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벌점제도의 확대를 통한 품질, 안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인데,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억 원 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에만 적용하는 부실벌점을 시공경험평가와 동일실적 경과 정도 평가에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공공 발주기관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들도 아파트 건설공사의 품질 점검 강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품질 강화 노력과 더불어 개별 건설기업의 자체적인 건설공사 품질 강화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관련한 논란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등장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공사 품질 관련한 논란은 2024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41만 8,535건에 달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주택시장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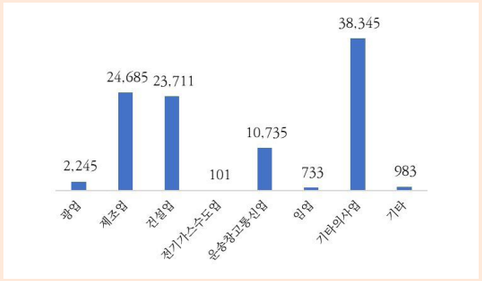
2.5 이슈 5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2024년 1월 27일부로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법 시행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그리고 노동단체 등의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심하였으나 결국 이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이 되었지만 사실상 중소건설기업의 대응준비는 극히 미흡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건설업계에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건설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644명 중 35%가 50인 미만 중소건설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중소건설기업의 확대 적용은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매우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4%가 '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준비는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한다고 하나,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충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적, 재무적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아울러, 고금리, 고물가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소건설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가 진행되어 중소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전체 산업재해자수 현황(2023. 9 기준)



〈그림 9〉 전체 사망자수 현황(2023. 9 기준)



2.6 이슈 6 : 건설기업 경영여건 지속 악화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 생산원가의 증가, 주택경기 위축 및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기업 경영여건

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9곳에 이르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한 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폐업 공고(변경 · 정정 · 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업체는 509개사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1군 종합건설기업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등 부동산 PF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중견, 대형 건설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9월 말까지 건설기업의 PF 보증 규모는 28조 3,000억 원으로 PF 차환 위험이 커지고 있어 건설기업의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 주택사업장 등의 공사대금 미회수와 PF 우발채무 리스크에 노출된 중견 이하 건설기업들의 유동성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형 건설기업까지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특히, 우발채무 증가와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신규사업장 착공 지연 등으로 신용평가에서 건설기업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더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건설기업 전반의 재무적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다행히 해외건설시장의 수주 여건이 개선되고, 최근 신규 진출사업 및 비주택 사업부문의 실적이 다소 개선되면서 대형건설 기업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나,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주택 등의 비중이 높은 중견, 중소건설기업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고,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저성장 경제의 고착화 속에서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이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중견 이하 중소건설기업의 경영 악화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7 이슈 7 : 신기술, 신사업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련 문제의 대응과 지속되고 있는 건설원가의 상승, 기술인력 부족 문제 등 당면한 건설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현안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 등 기획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상의 사업비용 절감 및 건설품질 · 안전관리 성과 향상과 생산성 향상 등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본격적으로 국내 건설산업 내 소개된 지 8년 가까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생산 및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은 전통적인 인력과 경험에 의존해 온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관리 활동에 새로운 관리기준과 관리방안, 정보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사업 등 기존 건설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환경 · 에너지 관련 시장의 성장 등에 따른 건설산업 분야의 신사업 진출 활동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건설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대형, 중견건설기업 중심으로 신사업 지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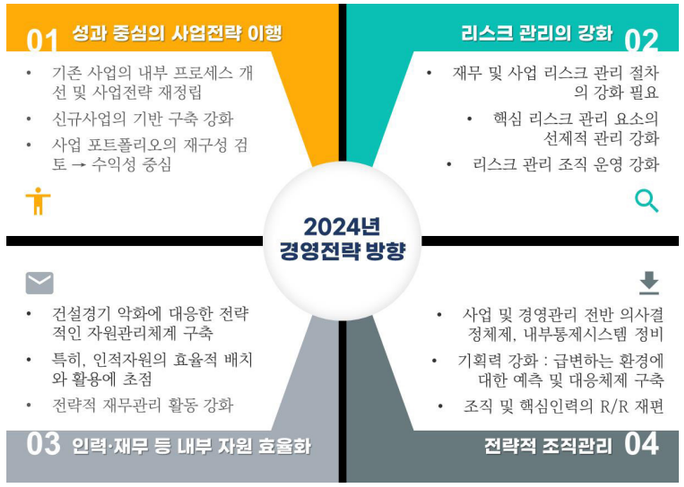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신사업 진출 활동이 지속 추진되어져 왔으나, 전사 차원의 전략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사업 등 기존 건설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시장 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신사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 건설기술 등 신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을 위해 건설기술의 신사업 육성 및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업 내부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3. 2024년 건설기업 경영 대응과제

2024년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종합해보면, 2024년 건설산업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은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대형건설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자금경색 심화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기업에 위험부담이 전가될 경우에는 도산하는 건설기업이 증가하고, 관련 협력업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여 건설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024년 건설기업의 핵심 경영 키워드는 첫째,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한 전략적인 '재무안정성 기반 내실경영의 구축', 둘째, 기존 사업들의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셋째, 건설산업의 핵심 리스크 관리요인이 되고 있는 품질과 안전경영의 실현을 위한 '품질 · 안전 최우선 경영' 그리고 단기와 중장기 수익창출을 위한 '신사업 확대 및 기반 확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 키워드를 바탕으로 건설기업 경영활동은 기존 사업의 내부 프로세스 개선과 사업포트폴리오의 재구성 등을 통하여 성과 중심의 사업전략의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재무 및 사업관리 상의 핵심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어느 때보다 인적자원, 재무자원 등 전략적인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 및 경영관리 전반의 의사결정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정비와 전략적 기획력 향상 등 전략적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금융권 및 건설 · 주택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PF 위기의 연착륙과 단기적인 자금시장 경색을 위한 추가적인 시장안전 대책은 물론, 건설기업의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과 주택경기의 회복을 위한 규제의 완화, 건설기업의 물량 확보를 위한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 확대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림 10〉 2024년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방향